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호우피해 납세자 납부유예 '최장 9개월'... 진행 중 세무조사도 중단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 우편발송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기본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납부를 지원한다.

지난 달 미처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어도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단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 소득세 인하... 지방세도 10% 차등 연계 인하된다

정부가 앞서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세 역시 기존의 납부액 중 10%가 줄어든다.

법인·개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부과하는데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지방세도 이와 연계해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2.5%에

서 2.2%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구간부터 4600만원 구간까지 단계별로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된다.

이밖에 지방세 납부수단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를 추가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분납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도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하도록 한다.

기업 과점주주(본인+특수관계인)의 요건을 2차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되 과점주주 상세요건은 시행령에 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긴 기업, 8년간 재산세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기업을 옮기면 8년간 재산세·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 기업과 사업장 신설·이전기업의 경우 5년간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 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업종을 전환해 인구감소지역에 남은 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농어촌공사 관련 농지확대개발 사업 및 임업후계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특례도 연장한다.

다만, 농지매매사업은 기존 취득세·재산세 각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취득세만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신 생산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에서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으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행 특례도 연장하되 기존 물류단지 시행자에 대해 부여하던 취득세 35%·재산세 35% 감면혜택 중 재산세는 기본 25%로 낮추고 지자체에게 10%p 내에서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동화 실천계획' 내 부동산에 대한 현행 감면 특례도 연장·유지한다.